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계천 의원 외 3명

제출연월일

2020. 8. 25.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09호
----------	-------

발의연월일 : 2020. 8. 25.

대표발의자 : 이계천

공동발의자 : 서 원, 박승용,
김남충

1. 제안이유

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 기준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으나, 관련기관의 사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시설 설치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적용의 특례 신설(부칙 안 제3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조례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20. 8. 25. ~ 8. 29.(5일간)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39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발전시설 설치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적용의 특례) 제20조제3항 [별표24]의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지연되어 개정된 규정의 시행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는 전기사업허가 당시의 조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신청되는 개발행위허가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이계천 의원 외 3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1조 ~ 제2조(생략) <u><신설></u>	부칙 제1조 ~ 제2조(현행과 같음) <u>제3조(발전시설 설치관련 개발행위 허가 기준적용의 특례) 제20조제 3항 [별표24]의 발전시설과 관 련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 라 전기사업허가를 받았으나, 관 련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 개발행 위허가 신청이 지연되어 개정된 규정의 시행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는 전 기사업허가 당시의 조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신 청되는 개발행위허가에 한한다.</u>
제3조 (생략)	제4조(현행 제3조와 같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

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